

전남도, 국고 8조 시대 총력

기재부·소관 부처 등 예산 확보 활동 전개

서남권 친환경선박산업 중심지 육성 강조

여야 정치권이 대선 경선에 집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전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내년 예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과 예산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 대선 경선이 10월 초까지 진행돼 설명회가 줄줄히 연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고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국고 8조 시대를 활짝 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7조 5,131억 원을 반영, 많이

확보했지만 낙후를 만회하기 위해선 길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과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혼연일체가 돼 뛰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김치생산전문단지, 김·도에서 유치를 바라고 있는 만큼 지역에 유치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도 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K-조선’ 비전선포에 따른 친환경선박 분야 메카 육성에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통령께서 고부가·친환경선박 중심의 세계 선박시장 시황 회복을 계기로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에 편승, 그동안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중소형 선박수리 지원센터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등 조선산업에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바탕으로 전남 서남권이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P4G 서울 정상회의 때 유치를 천명한 후 최근 몽골과 온라인 화상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태국과 라오스, 파키스탄 등에 지지요청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최지를 결정하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회의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 민생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응급의료체계와 교통 등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전남 첨단산업·그린에너지 도시로”

김두관 예비후보, 호남지역 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사진)은 14일 “광주·전남을 첨단산업·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을 선도경제로 도약시킬 산업 전환기에 강력한 균형 분권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산업화 시기 독재정권들은 수도권, 대기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펼치며 호남에 희생을 강요

해왔다”며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광주와 전남에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 전환기로, 광주·전남 경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앞서가는 선도 경제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며 “호남이 산업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 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권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통해 호남 시민의 1인당 GRDP(지역 내총생산)를 수도권과 부울경 수준으

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호남을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 군 공항 부지 그린 스마트 시티 조성, 에너지 밸리 육성,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등의 공약을 내놔다. /서울=강병은 기자

영세기업·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지원

도, 코로나19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시행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 2,000만 원을 경감했다.

또한 영입이 급저해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 원을 감면했다.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 2,000명에게 주민세 12억 원을 감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 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 중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612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해 3억 2,000만 원 상당을 감면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 세무조사로 대체하고 관공속박업·여행업 등 영세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감면을 크게 확대한다.

순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작은 위로와 일상회복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형석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허강숙 자원봉사센터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무안군 삼향읍 전문건설화관에서 열린 전남자원봉사센터에서 헌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컨트롤타워 역할

사무실 이전 개소·세탁차량 전달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14일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세탁차량 전달식을 개최, 도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소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문옥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도센터 이사, 유

관기관장, 자원봉사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세탁차량 전달식 순으로 진행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통해 도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자 등대가 돼주길 바란다”며 “자

원봉사 자원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전남도의 많은 자원에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전남의 발전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국토부 공항계획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14일 무안·광주공항 통합시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계획안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



대로 통합 추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자체간의 분란만 조장할 뿐인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의원은 차상위자·수급권자로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 현재 조항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추진 중

인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근로빈곤층인 차상위자·수급권자 대상사업으로 8월말 기준, 약 20만명(비정년+청년 포함)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이 좁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한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방 청년들을 포함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